

# “전주 법조타운 지역상생방안 찾아야”

### 이춘석 의원, “기존 부지 활용에 정서적 접근 필요… 법원 신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16% 불과”

신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 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고 법조타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지역 민심과 지역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 장석조 법원장을 향해 지역과 상생하는 법원이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우선 덕전동 일대 법원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주지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이 전북도민 사이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남다른 만큼, 이를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이 신규 법조타운 건설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인배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원과 검찰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신축공사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전북지역은 3곳에 불과했으며 수주 금액은 88억원 규모로 총 사업비 550억 가운데 약 16% 수준에 그쳤다. 반면 검찰청사의 경우 전북지역 업체 7곳이 참여해 약 189억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 353억원 대비 53.5%에 달하는 규모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주라고 전주업체만 참여하고 서울이라고 서울업체만 참

여야한다는 법은 없다면서도, “지방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왕이면 지역 업체들을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법원이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원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지역 친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배상금으로 유가족 순화 지시”

### 전두환정부 5·18 대응 문건 공개

전두환 정부가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공개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전남지사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배상금을 이용해 유가족 등을 순화시키고 유가족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전두환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내 여론을 전환하고 이후에 정치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희생자 유가족을 대했는지에 대해 담겨있는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을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을 A·B·C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이 두 번째 문건을 공개하며 “광주 쪽에 있던 희생자 분묘를 분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는 묘지가 모여있으면 그곳이 이후 저항의 근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용은 분명 ‘비둘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세부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을 통해 이장을 권유하고 실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항자 11명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성향을 분석하라고 한 지시도 있는데 결국 사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작업을 505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주도한 점인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도록 ‘전남개발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나서게 했다”며 “실제로는 이 문서에 의하면 그 단체를 만들고 그 뒤에 있던 것도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뉴스1



오늘 국감은 자유한국당 없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텅 비어있다. 한국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원 보결인사 선임에 반발해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 국정원 개혁위 발표… ‘화이트리스트’ 사실로

### 이용호 의원,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협, 전경련으로부터 각각 6억 받아”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2010년 각각 6억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 대기업 기부금 현황’을 보면 두 단체는 지난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3회에 걸쳐 6억 씩 지원받았다. 첫 번째 일시를 제외하고 기부금 지급 일시와 금액도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발표

한 ‘화이트리스트’가 사실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23일(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요청으로 소위 ‘좌파의 국정 방해와 종북 책동에 맞서 싸울 대항마로서 보수단체 역할 강화’라는 보수단체 육성방안을 마련했고, 보수단체와 공기업, 대기업을 부적절하게 매칭시켜왔다고 발표했다. 이 중 위 3개 단체는 S급 보수단체로 분류해 관리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기업 간 매칭사업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청와대와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인 목적으로 특정 단체들을 동원하고, 금전적 지원을 위해 기업들의 팔목을 비튼 것이다. 이는 명백히 범죄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원 개혁위원회 보도자료에 거론된 단체 중 위 3개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며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김관영, “국책연구원 채용 지적, 방만 운영 여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책연구원의 방만 운영이 도마에 올랐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올해 국감에서도 나왔다. 채용공고를 미국사이트에만 내고 서류전형도, 2차면접도 없는 채용도 있었다.

26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원 등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무조정실의 국책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종합감사를 받은 기관은 모두 17개 국책연구원이었으며, 이중 11개 연구원에서 채용 관련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구직 신입 박사 채용공고를 전미경제학회 채용사이트와 Eonjmarket 웹사이트 두 곳에만 게시하고 있었고, 그 결과 박사급 정규직 55명 중 미국학위 취득자가 49명이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정규직 채용에서는 평가기준 없이 서류전형을 진행했고, 위촉직의 경우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경력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출연연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이었다.

방만 경영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다수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7개 기관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 수당과 관련한 것 중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부당한 지급 역시 다수 출연연에 발생했다.

황당한 지적사항도 있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노트북 38대가 재물조사 결과로 사라졌는데, 이중 3대는 회수했고 35대는 변상 받았다. 그런데 변상 금액이 총 215만원에 불과했다. 노트북 변상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 지적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에 대한 예산을 모두 연구사업비 항목에서 각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40주년 세미나 기념품 제작시 직원용 기념품을 개당 15만원에 별도로 제작해 나눠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은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던 사안인데 쉽게 개선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엔 밝혀진 채용관련 지적사항은 심각한 취업난에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로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책연구원들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등의 대안을 정부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정동영 “SH공사 실제 자산 30조, 자산재평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공사 보유 자산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SH공사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1990년 이후 취득·보유한 8만 6,000세대 공공임대주택 장부 가액은 10조 7,000억 원이었으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면 SH공사 자산규모는 3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대체1단지 아파트 장부가격은 142억 원이었다. 그런데 부동산뱅크가 평가한 대체1단지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결과 대체1단지의 실제 가치는 장부가격의 6배, 9,5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같은 방법으로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자산 가치를 추정해본 결과 토지자산의 실제 가치는 25조원으로 장부가격과 4배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수서역단지, 가양5단지, 성산아파트, 중계3단지처럼 SH공사가 1990년대 초반 매입한 토지일수록 장부가격과 주변시세의 차이가 컸다.

정동영 의원은 박 시장에게 SH공사 자산 재평가를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참고해보겠다”며 검토 입장을 표시했다. /김진성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융합  
2017. 10. 21<sup>±</sup> - 11. 19<sup>日</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생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7년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2017년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김암서예관 김암 송성윤전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후원 **민족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ILJIN 일진그룹**